

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기”… 4·3 앞두고 약속

제주 4·3사건 78주년 평화공원 참배 “잊어서 안 될 역사, 반인권적 범죄” 9차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 등 연장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분향·헌화를 한 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임문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

다”며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제주 4·3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시는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편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퇴직연금

팡팡하게

불어나라

IRP

DC

DB

팡팡한 자산 성장을 맛보고 싶다면, KB증권 연금하세요

IRP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평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

ETF 리츠 TDF 채권

다양한 투자상품 모바일로 실시간 거래

AI Generated

투자를 똑똑!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953호(2026.03.05~2027.03.04)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결의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0.25%(주회 제비용 발생가능)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관례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 연 0.20%~0.25%(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DC 수수료: 연 0.20%~0.50% *과세 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하며, ETF 거래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추경 속도전 vs 신중론 여야, 처리 일정 ‘대립’

민주 “최대한 빨리” 내달 9일 목표 국힘, 대정부질문 후 16일 주장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처리 일정·심사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당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처리 일정과 본회의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의 진행 후 추경 심사를 해, 내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추경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진성준 예결위원장 주재로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동 종료 후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4월 첫째주 목요일에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그 다음주에 처리하지는 입장”이라며 “4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예결위 추경 처리 먼저 하자고 해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를 어떻게 할지는 양당 지도부가 협의해야 할 문

제”라며 “국회의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일정 협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14일로 이를 정도 당겨서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석유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심사 일정을 촉구했다. 특히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 제출이 3월 31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 전후로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먼저 하고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정부 질문 3일을 위해 (추경안 처리) 일주일 늦춘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은 주말 사이 장외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급등한 유가와 고환율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라며 “돈을 더 풀면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박았다. /서예진 기자